



김만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자유무역협상에 따른 오리산업 발전방향

현재 오리의 관세는 18%인데 타농산물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오리고기를 수입할 때 큰 방패막이는 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열처리 가공 제품 이외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한미간에 FTA가 타결되어 관세가 영(零)세율이 된다면 앞으로 전개될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도 영세율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현재 종오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2~3년 내에 우리나라도 오리 GPS사업을 할 것인데 안정적인 종오리 공급체계가 완결될 때까지라도 영세율을 막아야 오리산업에 희망이 보일 것이다.

2003년도에 AI 발병으로 오리소비위축으로 오리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위기 국면에 처했을 당시

가금수급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육용오리 및 종오리 수매사업으로 인하여,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금수급안정사업은 그동안 오리 업계로서는 도약의 발판이 되는 지지기반이었고, 성장의 동력구실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나마도 가금수급안정기금이 폐지된다니 막막한 일이다. 더구나 오리업계는 자조금사업도 없으니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 판이다.

지금까지 우리 오리업계가 홀로 성장해 왔듯이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종축·부화단계 - 생산단계 - 유통단계 - 도·소매단계 - 수출·소비단계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종축부화단계에서는 PS를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육농가에서는 계획된 마리수를 계획된 일자에 입식하는 등 사육경영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GPS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 된다.

한편 우량 종오리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산란율을 제고해야 하며, 종오리사나 부화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부화율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종오리 D/B를 구축하여 실용오리의 생산 잠재력을 파악하고 수급량을 자율 조절하고, 가축개량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일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철저한 방역실시로 오리간 염바이러스나 AI 등의 전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생산단계에서는 오리사의 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하여야 한다. 현재 육용오리사는 보온 덮개식 비닐 하우스가 많으나 표준 규격에 맞는 무창오리사 비

율을 높여야 하겠다. 그리고 가축공제에 대다수가 가입하여 눈사태나 폭우로 인한 피해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유통단계에서는 계열화를 확대하여 브랜드를 개발하여 유통함으로써 수입산과 차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소매단계에서는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매장에서 위생적으로 도축하여, 별크포장은 물론 1개 단위까지도 포장하여 우리 국내산 오리임을 명시(생산이력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수입오리는 한국 땅에 오리발은 내밀지 못하고 우리 국내산 오리발들은 활개를 치면서 쪽쪽 내밀 것이다. 그리고 소비지까지의 운반에 있어서도 냉장 탐차에 의한 위생적인 운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수출에 있어서는 대일 수출은 물론 오리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틈새시장도 노려야 한다. 수출확대 및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홍보사업이 필수인데 이 자금은 자조금사업이 제격이다. 우리가 스스로 자조금을 모으면 그만큼의 액수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이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자조금법”인 것이다. 우리 오리산업에서도 이 법에 의한 의무자조금은 못할지언정 스스로 할 수 있는 임의 자조금은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도매장, 계열주체, 농가, 부화장의 협조 즉 십시일반이 필요한 것이다. 협회비 거출도 제대로 안되는 판에 십시일반은 언급도 못하고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하나하나씩 이루어 질 때 무역자유화의 거대한 물결을 헤쳐갈 수 있고, 우리 오리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